

# 농업용 전기요금 부과 정상화 및 적용기준 개선 촉구 건의문

코로나 시국을 지나, 물가 상승으로 혹독한 겨울을 지낸 농민들은 올해 초, 불안감에 떨게 하는 소식을 들었다.

지난 1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농업용 저온저장고에 일부 가공품을 저장한 농가에 단속을 실시해 계약 위반이라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하였다는 것이다.

작년대비 금년도 농사용 전기요금이 1kwh당 16.1원, 갑96%, 을47%로 급격히 상승한데 이어, 단속과 위약금 부과가 전국 곳곳에서 시행되어 농가들의 걱정과 한숨이 늘어만 가고 있다.

한전이 주장하는 부당사용 근거는 농업용 전력을 사용하는 저장고에 일반 농산물이 아닌 쌀, 김치 등 가공 농산물을 일부 보관하였기 때문에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징수 하였다는 것이다.

21세기 스마트 농업으로 변화해가는 농업현실에서 가공품을 제외한, 단순 농산물만 보관해야 된다는 구시대적인 업무처리 약관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농사용 전력의 취지 또한 낮은 요금으로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인데, 쌀, 김치 등 가공농산물을 일부 보관한 영세 농가들에게 막대한 위약금을 부과한 것은 “농사용 전력”의 존재 의의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가공설비가 함께 들어 있는 등, 위반할 의도가 현저한 농가가 있다면 철저히 단속하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약관을 개정하지 않고, 단속과 위약금 부과만 하려는 것에 대해 농민들의 걱정은 분노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에 우리 영동군의회는 비합리적인 농업용 전기요금의 정상화와 적용기준 개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비합리적인 농업용 전기요금 부과를 조속히 정상화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라.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농업용 전력의 기본공급약관을 개정하고 적용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라.

2023년 3월 10일

**충청북도 영동군의회 의원 일동**